



[금요일]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하루만에 1.5만좌  
04



Life

[라이프]  
롯데마트  
미래형 소품공간  
'스마트스토어' 오픈  
니



# “어디로 가라고...” 40년 터전서 쫓겨나는 공구상인들

## 르포 서울 청계천 세운사가 일대를 가다

“청계고가 철거, 청계천 복원공사에 적극 협조했는데 막상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재개발을 할테니 수십년 지켜왔던 생업의 터를 떠나라는 것이다.”

지난 11일 아침 서울 중구 청계천 인근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는 이상순(65)씨가 가게 문을 열고 있다. 이씨 책상 뒤에는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조끼가 걸려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겠다'는 생각 하나로 1972년부터 청계천에 있는 공구상에서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씨는 8년만인 1980년에 지금의 가게를 마련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지켜온 자리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씨는 “세운사가 일대 재개발로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서울시가 70년대 산업 역군들을 대책 없이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운지구 일대 가게는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다. 일부 건물은 벌써 철거에 들어갔다. 셔터가 내려진 몇몇 가게엔 옮긴 곳의 위치를 알리는 약도나 '재개발 결사반대', '단결투쟁'을 써붙인 종이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1979년 세운사가 일대(종로구 종로3가동 175-4 일대 43만8585



지난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가 인근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는 이상순(65)씨가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 중구 세운사가 일대 산업용제 업체 셔터에 '단결투쟁', '재개발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써있다. /석대성 수습기자

### 상인들과 소통 부족한 재개발 대안 없는 상인들 천막 농성 임대인 법적 보호받기 힘들어

m<sup>2</sup>)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오세훈 시장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다 2013년 6월 박원순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목표는 세운지구를 ▲도심산업의 발전적 재편 ▲역사문화와 조화되는 도심관리 ▲점진적 정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보전 등을 통해 '창조문화산업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종로구·중구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특별

팀으로 구성해 주민 면담을 거쳐 재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이곳에는 2023년까지 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문제는 서울시가 주민·건물주와는 재개발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구상가 등 상인들과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청계천 2~4가에만 1만개 가량에 달하는 점포에서 약 4만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상인들은 인근에 대체 공구상가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안도 없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비대위는 4개로 나눠 구역별로 운영 중이다. 일부는 이달 초부터 중

무로 효봉빌딩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그곳은 재개발 시행을 맡은 한호건설이 위치한 곳이다.

37년간 공구상을 운영한 허모(65)씨는 “한호건설이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상인들을 협박까지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난 9월 한호건설은 합의하지 않은 상인 60여명을 상대로 1인당 3억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허씨는 당시 소송 내용증명서류를 보여주며 “한호건설 소송에 대부분이 겁을 먹고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했고, 이후 (한호건설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12일에도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효봉빌딩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 등을 낭독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에도 대규모 시위를 했다.

당시 비대위는 “서울시가 ‘도심 쇠퇴’라는 미명하에 생계를 말살하려 한다”며 “상인들을 위한 대책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현장을 찾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제입자 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대위가 박 시장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받아가기도 했다. 현재 행정2부시장실로 부서를 옮긴 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시장실 비서관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며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2부시장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다만, 상인들을 내보내는 것에 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갱신 요구 등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7호에 따르면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LNC 신유진 변호사는 “건물 노후로 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받은 경우 임대계약은 갱신하지 못한다”며 “법적으로 따졌을 때 (상인들) 보호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석대성 수습기자 bada@metroseoul.co.kr

## ‘서울기술연구원’ 출범... 도시문제 해결한다

###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개인 R&D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서울에 지자체 최초의 기술연구원이 출범했다.

서울시는 12일 상암동 DMC 산학협력 연구센터 1층에서 '서울기술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그간 고도 성장을 하며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으나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연구조직이 없었다.

시는 외부 개별 연구기관에 위탁·의존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원 설립을 추진했다.



300명 수준의 기술분야 연구직이 일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구원은 기획조정본부, 기술개발본부의 2개 본부로 구성됐다.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혁신융합분야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석·박사 연구진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연

구인력을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서울의 도시특성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이 건강한 도시 연구 ▲재난·재해에 안전한 도시 연구 ▲시민의 생활과 환경이 편안한 도시 연구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융합 도시 연구에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내년까지 1단계로 서울시의 현안과제를 우선 추진하는 연구기반을 조성한다. 2단계(2020~2021년)로는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연구역량을 키운다. 2022년부터는 IoT 기반 지능형 도시관리 체계를 만들고 민·관·학 연계 국내외 기술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재고품으로 만드는 크리스마스 장식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레코드' 부스 관계자들이 재고 스퀘터를 실로 풀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 산업폐수 수질오염물질 검사 강화

### 검사 대상 오염물질 대폭 확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019년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

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포함돼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경기도, 학교급식 비리업체 무더기 적발

### 불법 제조·납품행위 34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22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

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A업체를 포함하여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외부주차장 바다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딸기가 잡혔다.

/경기=김승열 기자